



#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윤원식 | 발행처: 대한민국의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28(23-6) | 2023. 6. 1.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현안과 미래 지향

박동순

제대군인 취업지원 이대로 좋은가

박용환

6월이 되면 떠오르는 생각

홍성표

##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현안과 미래 지향

박 동 순

(한성대 교수,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여정

한국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게 된 것은 1882년 ‘조미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다. 이후 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항복시켰고,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다. 미군정하에서 한국은 유엔의 지원 하에 정부를 수립했고, 그로부터 2년도 되지 않은 1950년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을 받았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유엔군사령부(UNC)를 창설하고, 회원국들의 전력을 통합하여 전쟁을 수행했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은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협정으로 멈췄다. 이로써 한반도는 차가운 양극체제의 최첨단으로 불안한 평화가 형성됐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군사적 협력과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양국은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정식명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혈맹(血盟)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70년을 거쳐 오면서 국내외 정세와 양국의 정책에 따라 협력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1960년대는 한국이 경제발전과 자주국방에 힘쓰면서 동맹과의 공조

를 위해 월남파병을 하였고, 주한미군이 감축되기도 했다. 이후 동맹은 군사안보 위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되어 무역마찰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겪으면서 더욱 긴밀해 지기도 했다. 한미는 1978년에 효율적 작전수행을 위해 한미연합사(CFC)를 창설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례적인 연합훈련을 강화해왔다. 1990년대는 탈냉전기로 한국이 유엔 가입과 북방외교를 추진하면서 동맹간 협조는 더욱 긴요했다. 이때부터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이슈화되어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추진 등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테러 등 새로운 위협 대응에 동참하였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 한미동맹의 주요한 현안들

그동안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군복 입은 미국 시민’인 주한미군은 동맹의 상징으로 우의를 과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글로벌 안보도전에 직면하여 한반도의 동맹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을 포함하는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맹은 현재 중국의 군사·경제적 패권이 급부상하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이 시급히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은 지난 3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핵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를 고도화 해왔다. 핵을 사용하기 위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했다. 핵탄두의 소형화다중화를 통해 한국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은 2023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발전한 ‘핵협의그룹(NCG)’를 운용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비핵화를 준수하는 한국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미래를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미국의 보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를 확약하지 않는다면 NPT 탈퇴나 독자적 핵 무장론 등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대응이다. 작전통제권 논의는 탈냉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권을 먼저 전환했다. 한미동맹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2006년부터 본격 협의하여 201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핵의 고도화와 도발 위협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 중이다. 이 문제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논

리보다는 군사적 조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과, 중국의 패권과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동맹은 이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준비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revitalization) 문제다. 유엔사는 그동안 정전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해 왔다. 1978년 연합사가 창설되자 작전통제권을 이양했지만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제공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미국은 전 작권을 미래연합사(한국군 대장)로 전환하게 된 후 유엔사 본래의 역할과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2006년부터 부사령관에 호주, 캐나다의 장성을 임명하고, 겸직해 오던 참모장에 별도의 장성으로 보직하는 등 유엔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7개의 후방기지를 두고 유사시 전력제공을 주관하게 될 유엔사를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염두에 둘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대한 유엔사 활성화에 한국군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사를 재활성화 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거나, 남북관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유엔사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제공하기에, 통일의 과정에서 국제적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낼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적 실익 차원에서 적극 관여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미래를 지향하며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23년 4월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미래지향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 기조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이렇게 평가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익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간에 중요한 과제는 산적해 있고 예상치 못한 난제도 있을 것이다. 화려하고 성대한 외교적 수사(修辭)의 잔치는 끝났다. 이제 냉철한 머리와 가슴으로 동맹이 대응해야 할 시급한 현안과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이다.

# 제대군인 취업지원 이대로 좋은가

박 용 환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전역을 앞둔 대부분의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취업은 제2의 인생설계이자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인생 100세 시대,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나를 위해 제2의 직장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적합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제대군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항구적인 위기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적합한 일자리를 가진 제대군인은 민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마주치는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대군인은 전역 후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직장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를 가보면 많은 전역 또는 전역 예정자들이 특정 부스로 몰리는 현상은 전역 후 사회와 연관된 기술이 없다보니 할 수 있는 직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즉, 취업 선택의 폭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소집해제를 포함한 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 주고,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주며,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등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시작하여 현재 2천5백여만 명에 달하는 제대군인을 위한 강력한 취업지원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미연방법전에는 “미국은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책무를 짊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노동부, 인사처, 제대군인부, 국방부 등에서 소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제대군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고용·직업훈련 차관보를 두고 매년 실적을 의회 제대군인위원회에 보고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63.5%에서 66.1%로 상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제대군인 취업률이 평균

9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무척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 취업에 성공해도 그동안 군에서 수행했던 직무와의 간극도 크다보니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직기간 및 주요 퇴직 사유를 살펴보면, 퇴직자의 약 50%가 3년 미만으로 재직하였고, 그 중 35% 이상이 전직을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가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정이라는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취업지원을 위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제대군인 채용업체 지원 확대'가 59.7%로 가장 많았고, '직업교육 훈련 확대'(27.9%), '취업정보 제공'(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창업자금 지원 확대'(29.5%), '창업교육 내실화'(29.3%), '상담확대'(26.9%)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 취·창업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정보부족'(37.3%) 및 '전문기술 부족'(36.9%)이 많았으며, 취업 후 직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전문성 부족'(29.4%)과 '연령'(24.4%) 및 '조직 내 대인관계'(15.4%)라는 응답이 많았다.

제대군인이 퇴직 후 보다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취업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취업신청자 개인별 적성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고용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민·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 취업자와 고용자의 이익제기 통로를 마련하여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5년 이상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젊은 층에서 군 간부 지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전역 후 제2의 삶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젊은 시절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로 나오는 제대군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남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6월이 되면 떠오르는 생각

홍 성 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되면 의례히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보훈이 그것이다. 6월이 오면, 우선 먼저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뿐인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국가를 보위하고자 순국하셨던 분들이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진다. 일제 치하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의 무대 용정에 가보면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이 세운, “사나이 이 한목숨 나라 위해 바치고자 하나, 바칠 조국이 없구나!”라는 탄식비가 서있다. 이 비장한 비문을 읽는 순간 가슴이 절로 미어저음을 느낀다.

한평생 조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서 헌신했던 이승만 전국대통령은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머슴으로도 살 수 있지만, 나라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강조하였고, 백범 김구도 “사람은 집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나라를 잃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류관순열사는 일제의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이 하나뿐인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라며 순국하였고, 그 부친과 오빠도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 아래 순국하였다. 순국열사들의 이같은 고귀한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고 있다.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일신의 영달을 위한 생업 못지않게 중요하나라!’

그렇다! 국권을 잃은 민족들이 겪은 수난의 역사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안겨준다. 제2차세계대전시 6백만 명이나 학살됐던 유대인들은 국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국제연맹이 나치스의 만행을 제지하려 해도 내정간섭이라며 일축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유럽 곳곳에서 우수한 경쟁력으로 대부분 풍요를 누리며 잘살고 있었지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치스의 학살 쓰나미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2천 7백만 명의 쿠르드족 또한 국가를 이루지 못한 탓에 소수민족으로서 4분 되어 온갖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겪고 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일제 치하의 대한제국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일제 만행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온갖 공출과 수탈로 조

선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오죽했으면, 뜻있는 민족지사들이 가산을 몽땅 처분하고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군을 일으키고 일제에 항거하지 않았던가.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국권을 잃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영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어떻게든 목숨이라도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일가의 희생을 불사했던 것이다. 그만큼 국권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면 이처럼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의 그 숭고한 헌신적 희생정신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존경심과 우국충정을 주체할 수 없다. 오늘의 이 빛나는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무한 희생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분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아낌없이 던져주신 것이다.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국가 체제가 정비되기도 전에 북한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전국토가 폐허로 변하였다. 하지만 전후 70여년 만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성장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이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이 목숨으로 씨뿌려놓은 터전 위에, 50년 이상 우리의 산업역군들이 불철주야 물불 가리지 않고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룩해낸 위업이다.

국가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군사, 산업기술 및 민주화까지 병행하여 이루어져,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부러워하는 세계10대 경제교역국, 6대 국방력, 여섯 번째 30-50클럽의 자유민주주의국가 위업을 달성했다. 실로 감개무량하지 않은가! 자원빈국인 데다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의 선대들은 순전히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같은 국가발전을 이룩해낸 것이다. 이러한 성공의 열쇠는 바로 한미동맹이었다. 중국 및 소련과 동맹을 맺었던 북한의 경제 파탄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 한류문화는 국제무대에서 유례없는 빛을 발하고 있다. 영화계의 최고봉인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비롯하여, 빌보드차트 톱을 달리는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남녀 뮤직그룹들의 글로벌 공연들, 그리고 축구, 야구, 빙상, 골프, 양궁 등 스포츠에서의 뛰어난 기량과, 바둑 및 E-스포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등은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켰다. 특히 BTS의 미, 영, 독, 프, 일본 등 매공연시 마다 10만의 관중들이 함께 불러대는 한국어 폐창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진풍경이 되었다.

이같은 국가위업을 달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집중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90년대

초중반 영국 유학 시절, 백화점 할인코너에 먼지 쌓인 채 싸구려 취급받고 있던 한국산 가전제품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들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맹활약하는 옹공단박사의 얼마전 증언은 실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백화점에 가면 한국산 가전제품들이 제일 비싼 가격대에 진열돼있고 할인도 일체 없어서 무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어디 그 뿐인가. 오대양육대주를 누비는 한국산 자동차와 선박을 보라. 실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책무가 있다. 국가안보는 개인의 생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애국선열들이 남겨주신 교훈을 오늘에 되새겨 보다 수준높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책무 완수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겠다. 또한 후진들이 이를 지속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훈육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한편, 호국보훈의 달에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국가보훈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유감이다. 과거 같으면, 제대군인들은 국가 차원의 주선으로 자연스럽게 일반사회로 진출해갔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명색만 요란하지 실제로는 제대군인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얼마 전에 만난 한 제대군인 지인은 전역 후 100회 이상 취업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낙방하고 말았다. 그는 “내가 군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총기 다루는 기술인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것은 아무 쪽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다”며 한숨지었다. 군에서 고위급 장교로 전역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치는 현실이다.

군에서는 천군만마를 지휘통솔하며 국가방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지만, 겨우 60세도 못되어 경력이 단절되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출중한 리더십과 분야별 전문성이 우리 사회에서는 더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인가. 그같은 경륜을 대한민국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겠는가.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제대군인들의 훌륭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십분 살리는 국가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 많은 인력관리 경력가들이 대한민국 육군 말고 어디에 또 있는가?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다루는 축적된 경륜은 공군 말고 어디에 또 있으며, 조선해양입국을 실현해온 대한민국 해군 말고 어디에 또 그같은 해양전문가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팽배해온 군출신들에 대한 편협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 건실한 애국교육 도장



인 군대를 제대로 평가하고 군출신 경력가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들은 이 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훌륭하게 이끌어냈던 국보급 인재들이었다. 국가에서 장기간 공들여 양성해낸 인재들을 대한민국 사회가 존중하고 적극 활용해야지, 사장시켜서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디에서 그런 전문경력가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답변해야 한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들에 대한 마음속으로부터의 깊은 감사와 함께, 국가백년대계를 이어갈 초석인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보훈 차원의 전문인력 활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힘들게 군복무하면서 축적해온 경륜과 전문성을 국가발전 위한 현장에 투입하여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대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